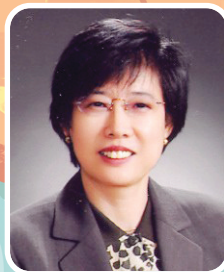


‘새로운 충남’으로 가는 행복한 민관 파트너십



민경자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우리가 ‘지방화’ 즉 정치·행정에서의 지방화(localization)를 말하기 시작한지 벌써 20년이 되었다. 지방이 중앙중심의 질서에서 탈피하여 정치 경제는 물론 사회조직 및 문화의 창조 등에서 자율성을 갖고 시민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이 지방화이고 지방자치이다. 이를 통해 중앙의 의제를 단순히 지역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이해와 욕구에 입각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책에 대한 집행도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은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행정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제 주민과 지방정부의 만남은 긴밀해 질 수 밖에 없고 민과 관이 함께하는 정치·행정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받게 되었다. 민관 파트너십은 이제 미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공직사회의 전략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오랜 관료적 전통과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왔고 그 결과 정책과 주민과의 괴리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공직사회는 시민사회에 비해 변화에 대한 감수성이 낮아 시민사회를 선도하지 못하고 ‘고답적이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조직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로 부터의 투입과 외부와의 인위적인 연결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민관협력체제 결성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공직사회의 혁신의 과정이며, 그 결과는 바로 혁신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분야별로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런 기구가 과연 민간참여 정책개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과연 그러한 기구가 민관 파트너십에 의해 구성·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의 참여를 증진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과 관이 종래 가지고 있던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개방된 자세가 필요하다. 민간(전문가, 현장실무자, 사회운동가 등)을 바라보는 공무원의 시선과 관을 바라보는 민간의 시선이 좀 ‘쿨’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종래 민간에 대한 ‘형식상 존중과 내용상 무시’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 앞서가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민간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즉 민간의 참여를 ‘귀찮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자주 만나면 소통의 방식이 떠오른다. 소통을 통해 정서적으로 편안해 져야 민관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관의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 운영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관이 내용적으로 주도하고 민간의 승인을 유도하는 형식적인 협력체계가 아닌 내용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방식에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단 한 번의 모임으로 뭔가를 결정하기 보다는 몇 차례의 비공식적인 실무모임을 통해 의제 개발에서 프로그램 개발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도록 확대되어야 진정한 민관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나 협의회 구성에서 지나친 명망가 중심에서 탈피하여 전문가, 활동가 중심으로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관의 많은 위원회가 형식으로 흐르는 것은 다분히 내용적으로 잘 모르는 고위직 공무원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담당자가 해온 시나리오대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방식의 위원회로는 민간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기 힘들다.

또한 이제 공무원도 토론에 익숙해 져야 한다. 시민사회는 토론을 통해 사회 이슈를 개발해 내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이러한 민간과 소통하는 방식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종래 위계 사회에서 습관화된 침묵은 머리마저 굳게 하고 있다. 이제 공직 사회에도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公務’의 질적 향상과 정책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민선 5기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내세우며 출범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야겠지만 가장 시급한 변화는 정책결정방식과 민과 관의 관계에서의 변화가 아닐까 한다.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을 보는 관의 시각과 관을 보는 민간의 시각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럴 때만이 진정한 ‘민관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불신의 골을 메울 수 있는 길은 민과 관이 서로에게 품고 있는 불만과 편견을 터 놓고 끝장 토론을 통해 상대방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는 길 뿐이다. 민선 5기 충남이 참여와 소통을 통해 성공하기 위해 하루 빨리 해야 할 일이다.